

국민권익  
국민권의 보호, 신뢰받는 정부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2015  
VOL.45

07  
08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 여성 새로일하기센터가 달려갑니다

전국 140개소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대표전화 1544-1199

직업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집단상담 (1:1 맞춤형 상담, 진로상담 등)</li> <li>○ 취업 정보제공</li> <li>○ 취업 정보제공</li> </ul>	
직업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의식교육, 능력개발교육, 면접교육</li> <li>○ 기업위탁 새일역량교육</li> </ul>	
취업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구인 연계</li> <li>○ 인턴십 지원 (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li> <li>○ 면접동행</li> </ul>	
사후관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멘토링 등 직장적응 및 경력개발지원</li> <li>○ 사업장 인식개선, 환경개선 지원</li> </ul>	

## CONTENTS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5 07+08 vol.45



### Special Theme

- 04 스페셜 1 국민신문고 10년, 속 시원~하게 통하셨습니다?
- 08 스페셜 2 국민신문고, 국민의 삶 속으로 진심을 다해 뛰어든 십 년의 기록
- 10 스페셜 3 권익위의 정부3.0 우수사례, 국민과 함께 선정한다
- 12 연중기획 권익위와 함께 간다 두 자매와 할머니의 행복한 내일을 꿈꾸며~



### 소통 공감

- 14 현장 24시 대한민국 청렴 문화의 주춧돌, 청렴연수원을 가다
- 18 글로벌 ACRC 한-호주, 재외국민 권익보호 교두보 마련
- 22 권익위가 간다 한 마을 갈라진 두 동네, 45년간 고립된 경주 광명4동 마을의 숙원을 해결하라!
- 26 이슈 포커스 모두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다
- 28 국민권익 Q&A 국민의 마음으로,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 30 행복 공감 지금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
- 32 핫 민원 키워드 휴가철 국내 여행 불만 순위! 요금 > 불친절 > 위생불량



### 행복 나눔

- 36 청렴 토크 거울에 비친 스스로를 돌아보는 청심의 자세
- 40 일상생활 개념노트 우리 집 냉장고야, 더위를 부탁해~
- 42 문화 레시피 떠나자! 열대야를 잊게 할 문화바캉스~
- 44 똑똑! 생활법률 흔히 일어나는 교통사고 처리,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 46 꼭 알아두세요! "청년에게 내일을, 미래 세대에겐 희망을"
- 48 ACRC News
- 50 독자 움부즈만

발행일 2015년 8월 15일 (격월간, 비매품)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이성보 편집인 임윤주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전화 044.200.7075 팩스 044.200.7911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loveacrc  
기획,디자인,인쇄 이팝 02.514.7567 www.eepop.co.kr

## 정부의 일가정양립 정보를 한데 모아 '일가정톡톡' 모바일 앱!

\*출산휴가·출산장려금 정보, 아이돌봄 서비스·유아학비 지원 정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정보 등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 '일가정톡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네이버, 애플 앱스토어, 티스토어에서 다운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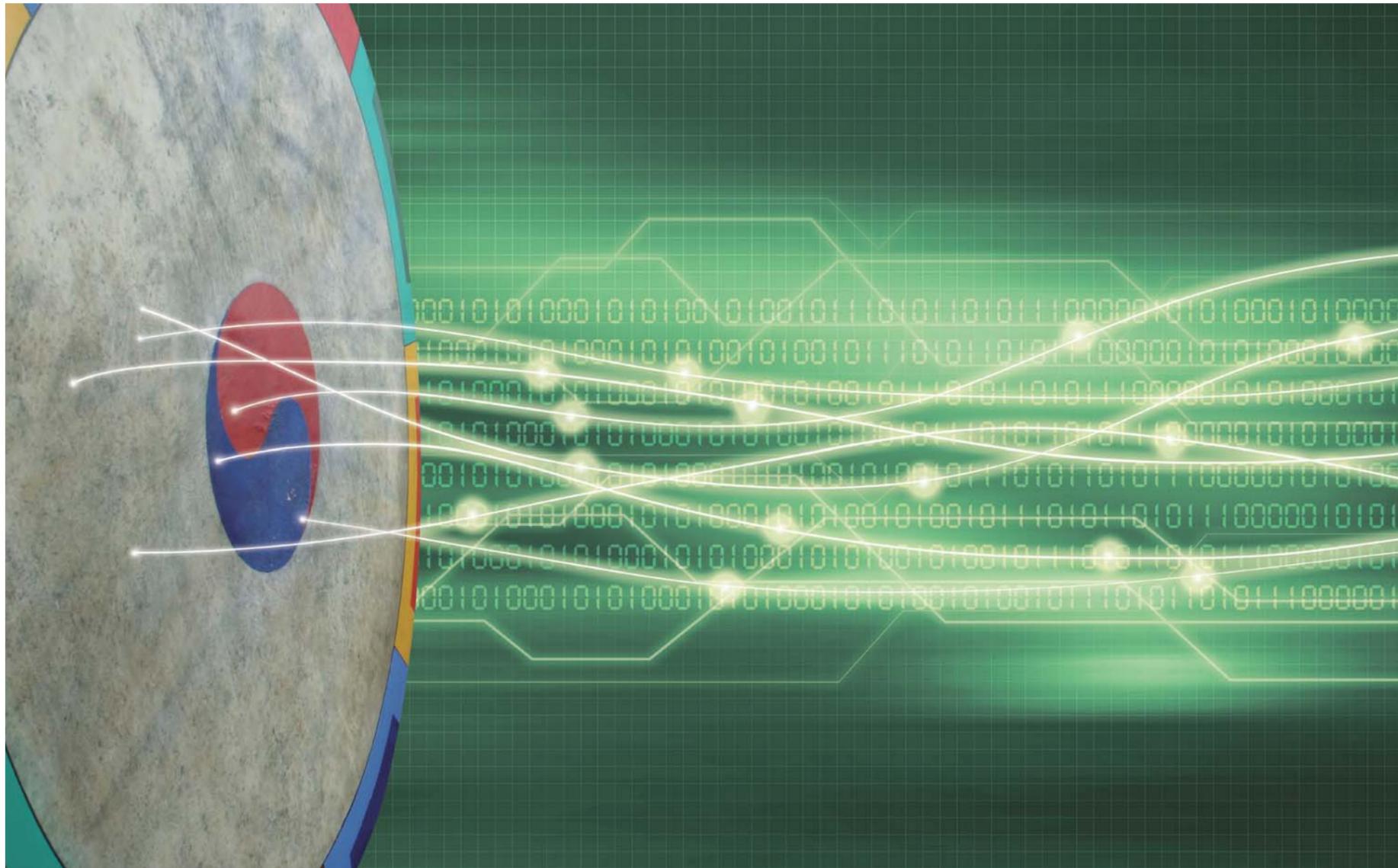
자료 제공: 권익위 국민신문고과

정리: 윤진아 기자



# 국민신문고 10년,

## 속 시원~하게 通하셨습니다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쉽게 전파하는 것이 가능해진 정보화 사회. 이러한 변화는 많은 국가들이 국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우리 정부 역시 ICT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국민의 소리를 통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과거 조선시대 대궐 밖 문위에 걸여놓고 억울하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왕이 들을 수 있게 복을 치도록 한 '신문고'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발달된 ICT기술을 융합시켜 현대판 신문고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었다.

###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 없는 국민신문고

2005년 8월, 7개 기관의 민원처리 시스템 통합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을 개시한 국민신문고는 2006년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통합한 후,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2011년에는 모든 교육청의 민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뒤, 2015년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주요 공공기관 등 850여 개 기관이 연결된 범정부적인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국민신문고 구축 당시 대표적 기능은 '민원'과 '제안'이었으나, 점차 기능을 확대하면서 정책참여, 각종 신고 등이 추가되었고, 현재는 정부 기관에 대한 모든 민원, 제안, 정책참여, 각종 신고 등을 하나의 창구에서 간편하게 처리하는 국민 소통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2008년 영어·중국어·일본어를 시작으로 현재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12개국 관련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8년에 새롭게 추가된 '정책참여'는 정책 사업 시행, 법령 제정 등에 대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반영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의 장으로서 기능하며, 국민들은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법령 제·개정 사항에 대해 토론방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 2013년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제안에 대해 정책에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국민제안'을 '국민행복제안센터'로 확대·개편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예산 집행 사례를 신고하고, 예산 절감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예산낭비신고'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한 경쟁 등 공익 침해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 창구도 마련되었다. 다시 말해 이제 국민은 각종 정부 기관에 불편한 점이나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 없이 국민신문고를 클릭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 숫자로 보는 국민신문고 10년의 성과

최초 개통 이후 10여 년이 지나오면서 국민신문고는 하루 평균 약 3만여 명의 국민이 접속하고, 연간 약 26억 원의 예산과 약 4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운영·관리하는 대한민국 대표 정부 포털 시스템으로 성장했다. 기능과 규모가 확대되고 편리성이 알려지면서, 국민신문고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2006년 26.8%에서 2014년 62.7%까지 크게 상승했고, 이로 인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6년 40만 건으로 시작한 민원 접수 건수는 2010년에는 두 배인 80만 건을 넘었으며, 2014년에는 169만 건의 민원이 접수·처리됐다.

또한 통합된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의 처리 기간은 오히려 단축됐다. ‘일반민원’의 경우 2006년 7.8일에서 2014년 6.3일로,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처리되는 ‘복합민원’의 경우 2006년 14.4일에서 2014년 7.4일로 점점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민 생활 속 행정 개선 아이디어에 대한 제안 참여도 꾸준히 증가했다. 2005년 1만 6천여 건에 불과하던 제안이 2014년에는 약 11만 8천 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3,820건이 실제 정책으로 채택됐다. 이밖에 온라인 토론의 장이 구현되는 ‘정책참여’ 창구를 통해서도 지난 한해 2,800여 개의 정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토론과 의견 조사가 이뤄졌다.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의 국민 소통과 참여에 대한 기능은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국민신문고는 구축된 지 바로 이듬해인 2006년에 프랑스 세계전자정부대회(e-Gov) Top 10에 선정됐고, 세계 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 지역 대표 사례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2011년에는 UN공공행정상을 수상했다. UN전자정부 평가의 온라인 참여 지수 부문에서도 2010년, 2012년, 2014년 3회 연속으로 1위를 달성했다. 더불어 이러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2012년에는 튀니지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부터 국민신문고 수출을 위한 ODA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 조선시대 대궐 밖 문 위에 걸어놓고 억울하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왕이 들을 수 있게 북을 치도록 한 ‘신문고’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발달된 ICT기술을 융합시켜 현대판 신문고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었다.”



지난 10년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국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 창구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권익위의 국민신문고가 해야 할 일들은 많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단순한 민원 접수·처리 시스템에서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 협력 대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민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집단민원 발생 및 사회적 갈등 유발 등 오히려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국민이 자유롭게 국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참여하면서 정책을 완성시키는 ‘협치(Governance)’는 요즘의 국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국민신문고는 이미 ‘제안’과 ‘정책참여’ 등의 기능을 통해 ‘정부-국민 간 온라인 소통 창구’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더 나아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제안과 토론을 통해 정부 정책의 대안을 정립하는 ‘국민 주도형 소통 창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올해는 국민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고, 많은 사람들의 토론과 추천을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를 숙성·발전시키는 ‘집단 지성형 아이디어 플랫폼’을 구축, 국민이 직접 원하는 정책 대안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민관 협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신문고는 하루 평균 약 3만여 명의 국민이 접속하고, 연간 약 26억 원의 예산과 약 4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운영·관리하는 대한민국 대표 정부 포털 시스템으로 성장했다.”

국민신문고에는 연간 100만 건이 넘는 국민의 소리가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민원의 동향과 발생 추이 등 의미 있는 정보를 분석해 각 행정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한 후 사후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당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실제로 권익위는 지난 10여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해, 민원 발생을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민원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 ‘민원 분석 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 등에 접수된 국민의 소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책에 환류되도록 지원하며, 민원 동향·발생 추이·이슈 등 의미 있는 정보를 각 행정기관에 제공해 정책 개선까지 유도하고 있다. 민원 속에 담긴 국민의 요구와 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각 행정기관이 정책을 수립·추진해낼 수 있다면, 민원 예방뿐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을 예방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신문고가 명실상부한 원스톱 민원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결된 850여 개 기관 외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통합시켜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제 개혁·안전 체보 등 정부가 운영하는 특정 분야의 정부 포털과도 연계 체계를 꾸준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언제 어디에서든 국민신문고를 통하면 정부와 소통할 수 있고, 그것이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권익위의 국민신문고는 열심히 달려 나갈 것이다.

글  
전채련 기자

# 국민신문고

## 국민의 삶 속으로 진심을 다해 뛰어든 십년의 기록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민원 해결

사랑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불편 해소

기차표 날린 부모님도 이제는 안심!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정책으로 반영

하루만 연체해도 1달치 연체료라니...



온라인을 통해 정책 참여 기회 제공

국민이 직접 사교육 문제 해법 도출!



### 생이별한 발달장애 연인에게 혼인 신고 지원

복지 시설에서 사랑을 키워 온 지적장애인 A씨와 B씨는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 신고를 위해 시청을 찾았다. 하지만 시청에서는 지적장애인가의 결혼이란 이유로 부모, 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며 혼인 신고를 반려했다. 그러나 B씨의 부모님은 돌아가신 상태였고, 형제가 있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가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성인인 A와 B가 자유의사에 따라 혼인해 부부로 살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의 사연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었다. 권익위는 두 사람의 명확한 혼인 의사를 확인한 후, 해당 시청이 지적장애인의 혼인을 저지할 것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혼인을 포함 일상생활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적극적으로 혼인 신고를 지원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현재 두 사람은 축복 가운데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잘 살고 있다.

### 열차표 반환 규정, 국민의 목소리 하나로 모아 개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역에서 구입한 기차표를 환불하려면 전화로 반환 접수를 한 뒤, 해당 승차권의 출발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출발역이나 구입역에 승차권을 제출해야만 했다. 이러한 이유로 열차 이용객들의 불만이 모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열차표 환불 시 승차권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출발역과 구입역에서만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자, 코레일 측에 반환 기간 연장과 승차권 반납 장소 확대를 적극 권고했다. 이후 코레일은 2013년 7월부터 반환 기한을 열차 출발 후 7일 이내로 대폭 연장하고, 반환 장소도 전국의 모든 역으로 확대했다.

### 도시가스 연체료 부당 부과 규정 개선

2005년 이전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간의 연체료(월 2%)가 즉시 부과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07년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정하고, 연체료 계산 방식을 일할계산으로 전환해, 전국 시도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2014년 1월, 월 2%의 연체료 적용을 연간 5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연체료 일할계산을 월할계산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은 물론, 일부 지역 도시가스 업체는 연체 요금을 산정할 때 미납 요금에 부가세를 포함시켜, 상대적으로 연체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가스의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행복제안이 접수되었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의 제안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해, 전국 시도 지자체와 협조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재개정했으며, 서울시는 3월, 경기도는 4월부터 일할계산 방식으로 연체료 부과 방식을 전환했다. 또한 연체 요금을 산정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미납 요금에만 연체율을 적용하도록 부과 규정을 전격 수정했다.

### 사교육 경감 방안 모색을 위한 국민신문고 공공토론 개최

교육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전 계층과 관련된 대국민 관심 이슈이며, 특히 사교육비는 가계에 극심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가계 소득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비는 유독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교육부·민간 포털(DAUM)과 함께 사교육비의 부담을 낮추고, 누구에게나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국민신문고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약 4주간 진행된 온라인 토론회는 약 52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6,302건의 자유토론 의견 글, 9,086명의 설문조사 참여가 이뤄지는 등 사교육 관련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권익위는 온라인 토론회에서 나온 공교육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 정책, 사교육을 유발하는 각종 입시 제도 및 운영 구조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해, 정책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 해당 내용을 제공했으며, 국민신문고 공공토론을 통해 이뤄진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교육 정상화법' 제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글: 윤진아 기자

# 권익위의 정부3.0 우수 사례 국민과 함께 선정한다



권익위의 대표적인 국민 중심 정책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였다. 권익위는 '정부3.0 정책' 가운데 우수 사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행, 우수 사례 3가지를 선정하였다. 국민과 함께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 중심의 정책을 구현해 나가기 위함이었다.

## < 권익위 정부3.0 우수 사례 들여다보기 >



### 속 터지는 민원 떠넘기기, 이제 그만! **'핑퐁 민원'** 신속한 조정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된 민원이 행정 기관 간 떠넘기기로 접수와 처리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기관끼리 3회 이상 이송시키는 민원을 권익위가 회수·심사한 후 처리 기관을 지정하는 정책이다. 민원 접수 지연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민원 서비스 품질과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 사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시행 후 통신 분야 민원이 속출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간 '핑퐁 민원' 현상이 만연했다. 이에 권익위는 두 기관과의 순차 회의를 통해 관련 민원에 대한 기관별 역할 분담을 조정했다.



### 국민 험세 낭비하는 재정 누수 차단! **범정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

정부 예산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 분야뿐 아니라 비복지 분야의 보조금까지 아우르는 권익위의 범정부 차원 전문 신고 처리 기관이다.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전담 조사관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문적 감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 사례

모 기업체 대표 A씨가 정부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무관한 자사 제품 제작에 나랏돈을 사용하고,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연구개발비 1억여 원을 부정사용해,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에 신고 처리했다.



### 집단 갈등, 대화와 소통으로 현장에서 해결! **집단민원** 현장조정 강화

집단민원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의 중재와 갈등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최적의 상생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집단갈등 해소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소통과 대통합, 정부의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 사례

아파트 인근 철도·도로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관련해, 저소음 도로 포장 및 방음벽 설치 등의 대책으로 현장에서 집단민원 조정 (2015년 6월 5일)



### 단일 번호로 모든 정부 기관의 궁금증 해결! **정부콜센터 단일 대표 번호** 110 통합 확대

복잡하고 다양한 각 정부 부처의 콜센터 전화번호를 정부 대표 번호인 '110'으로 단일화한 정책이다. 누구나 110번만 누르면 모든 정부 기관에 대한 문의와 상담이 가능해,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 2014년 (1단계)

4개 기관(해수부, 농식품부, 교육부, 권익위) 콜센터 번호 110으로 단일화

#### 2015년 (2단계)

4개 기관(국토부, 미래부, 외교부, 기상청) 콜센터 번호의 단일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통합 운영 추진 (2015년 12월까지)



### 민원 발생 사전 예보로 국민 불편 최소화! **생활불편 민원예보제** 도입·운영

국민신문고 등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주기적으로 겪는 불편 사항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대책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생활불편 민원이 매년 반복되는데도 민원이 발생한 후에야 대책이 마련되는 것을 방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 사례

여름철 악취 피해 민원 예보 (6월) : 악취 민원 다발 시기인 7~8월을 앞두고, 악취 피해 유형 등을 소관 기관에 사전 제공해 대책 마련 촉구



### 청렴도, 맞춤형으로 진단하고 처방! **부패 취약 기관** 청렴 컨설팅

부패가 빈발하거나 청렴도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제도·행태 등을 다각도로 진단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관별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청렴도 저조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시책 제시로 공공 분야 전반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사례

2013년 총 13개 컨설팅 대상 기관의 소속 기관까지 아우르는 청렴 대책 추진 체제를 구축, 기관별 맞춤형 처방을 내려 13개 기관 중 10개 기관의 청렴도가 전년도 대비 크게 향상되었다.

글:  
진정은 기자



## <독자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

# 두 자매와 할머니의 행복한 내일을 꿈꾸며~

권익위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사정을 헤아리며, 희망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 호 <국민권익>에서도 <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 가족에게 작은 마음을 선물했습니다. 갑상선암 수술 후 뇌 병변까지 겹쳐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와 어린 두 자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접했기 때문이었지요. 하나하나 모인 권익위의 작은 정성이 이 가족에게 전해져, 두 자매가 또래 학생들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내일을 조심스레 꿈꾸어 봅니다.

<나눔 프로젝트>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국민권익> 매거진을 읽으신 후, <국민권익> 매거진 편집실로 엽서 한 장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을 모아 엽서의 숫자만큼 모금액을 적립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입니다. 요즘 부쩍 할머니와 여동생이 걱정됩니다. 제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지라 일주일에 1번 할머니와 여동생을 만나는데, 할머니께서 매우 편찮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8년 전 어머니와 이혼하신 뒤, 집을 나가셨습니다. 점점 연락이 끊기더니 아버지의 소식은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할머니 손에 길러졌습니다. 그런데 늘 곁에서 저희 자매를 사랑해주시던 할머니께서 별안간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항상 피곤해 하시며 음식을 삼키시는 걸 불편해 하셨는데, 그저 연로하셔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알고 보니 할머니의 병명은 갑상선암이었습니다. 어렵사리 수술을 하고나서도, 할머니께서는 뇌 병변 때문에 여전히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화장실을 가실 때도 누군가가 옆에서 부축을 해드려야만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4시간 동안 할머니의 병 수발을 들지만, 오후에는 초등학교 6학년인 동생이 병 수발을 대신합니다. 한창 어리광 부릴 나이에 힘든 일을 해내는 동생을 보면, 안쓰러운 생각도 듭니다. 그럴 때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 할머니와 동생을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동생도 저와 마찬가지로 학교도 성실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이런 저희 자매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생필품이 다소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용품이 없어 곤란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어찌 아셨는지, 권익위 이동신문고에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주셨습니다. 동생과 제가 그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어찌나 마음이 든든하던지, 동생도 저도 당분간은 노트가 없어 막막할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끔 힘들 때면 제 처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신 분들이 많았기에, 희망을 가져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저 또한 '저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멋진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세 식구가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를 쉽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자매도 용기를 갖고, 앞으로 학교생활을 더욱 잘 해나가겠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ACRC



### 소통 공감

- 14 **현장 24시** 대한민국 청렴 문화의 주춧돌, 청렴연수원을 가다
- 18 **글로벌 ACRC** 한-호주, 재외국민 권익보호 교두보 마련
- 22 **권익위가 간다** 한마을 갈라진 두 동네, 45년간 고립된 경주 광명4통 마을의 숙원을 해결하라!
- 26 **이슈 포커스** 모두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다
- 28 **국민권익 Q&A** 국민의 마음으로,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 30 **행복 공감** 지금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
- 32 **핫민원 키워드** 휴가철 국내 여행 불만 순위! 요금 > 불친절 > 위생불량

글:  
이용규 기자

사진:  
정준택(fun studio)

# 대한민국 청렴 문화의 주춧돌,

# 청렴 연수원

을 가다

‘청렴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우리나라 최초의 청렴 전문 교육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문에 놓인 비석의 글귀다. 2012년 10월 25일 청렴 교육을 전담하는 독립 기관으로 출발한 청렴연수원은 공직자와 공공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청렴한 인재 양성’을 위해 혁신적인 청렴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여 왔다. 청렴하지 않은 사회에서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법. ‘느끼고 변화하는 실천 지향의 청렴 교육’을 목표로 삼은 청렴연수원의 하루를 따라가 보았다.



▶ 청렴 교육에 열중한 청렴연수원 연수생들

## 재미, 감동, 깨달음이 있는 청렴 교육 프로그램

한여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24일 오후, 청렴연수원 강의실에서는 서울 길원초등학교 김인태 교장을 초빙해, 명사 특강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교사 대상 청렴 교육 전문가 과정’이었던 이번 교육에는 전국 각지에서 28명의 교사들이 참가했다. 특히 이날은 명사 특강과 함께 붓글씨 수업이 이어졌다.

청렴 교육에 참가한 교사들 모두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강의 중심에서 벗어나 연극·콘서트·강연·토론·붓글씨·관소리 등으로 구성돼 재미와 감동, 그리고 깨달음까지 겸비한 교육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청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INJOY 프로그램’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청렴 교육을 재미있게 받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닫힌 마음을 열고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 쉽게 다가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의 교육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이러한 청렴 교육의 성과는 교육을 통해 청렴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발견했고, 향후 제대로 청렴을 실천할 의지를 얻게 되었다는 교육생들의 후기 및 평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권익위 청렴연수원의 교육 과정은 일방적인 강의 중심에서 탈피해,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 철저한 사례 위주의 교육과 과학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 개인 성격별 부패 대처 방안 토론 등을 통해 교육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 가장 호응이 높았던 것은 청렴연수원의 대표 프로그램이자, 최근 공직 사회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청렴 콘서트'. 이는 권익위가 개발한 공연·토크쇼·강의가 융합된 청렴 교육 프로그램으로, 퓨전 관현악단의 연주와 7080가요가 어우러진 가운데 청렴 이야기 한마당을 펼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냈다. 또한 극본에서부터 출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청렴연수원 간부 및 직원들이 담당한 청렴 역할극 <고이사의 하루>를 통해서도 전 교육생들의 공감을 얻으며, 큰 박수를 받았다.

### 청렴은 문화다

우리나라 청렴 교육의 시작은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했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국가청렴위원회로 기관명이 변경되면서 청렴교육관이 개관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으로 확대되면서 공무원 전문 교육 훈련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공직 사회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엄정한 적벌, 처벌과 같은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부패를 스스로 통제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렴연수원이 쉽고 편하게 다가가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렴을 사회 전반에서 느끼고 공감하는 문화로 완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2년 개원한 이래, 이제 3년 차에 접어 든 청렴연수원. 그간 이곳을 다녀간 교육생들은 청렴 교육 과정이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고 평한다. 일반적으로 청렴 교육이라 하면, 웬지 딱딱하고 지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나는 충분히 청렴한 사람인데, 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권익위의 청렴 교육을 접하면, 실제 업무 환경에서 겪는 문제점들을 생각하며 청렴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자신을 되돌아 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교육생들의 후일담은 청렴연수원 직원들의 자부심을 키우며, 청렴연수원의 존재 가치에 힘을 실어 왔다.

“청렴연수원은 공직자와 공공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청렴한 인재 양성'을 위해 혁신적인 청렴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여 왔다.”



## MINI INTERVIEW

### 정대우 주무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  
청렴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왔다가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접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이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가벼이 치부해버리기 쉬운 사실들을 일깨워주고, 공사를 엄정하게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청렴연수원 교육의 핵심입니다. 청렴연수원은 기관별 교육 니즈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많은 교육생들이 청렴연수원을 방문하거나 사이버 교육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청렴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전정민 교사

충북 음성 남신초등학교

●●●  
교직 생활을 18년 동안 해오면서 여러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특별한 기회를 얻고 싶어 청렴 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지금까지 선량하게, 기준에 맞춰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더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4박 5일 일정 동안 깨달은 점은 교직자의 청렴은 아이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며, 아이들을 사랑과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청렴연수원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인사를 전합니다.



### 이영자 교사

서울 강남초등학교

●●●  
청렴연수원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청렴 교육이 딱딱하고 형식적인 거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박 5일의 교육 일정 동안 받은 청렴연수원의 프로그램들은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 축축이 젖어지게 만드는 콘텐츠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교육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렴'이란 말을 강조하지 않아도 교육생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힐링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모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청렴 문화가 기분 좋은 도미노 현상처럼 우리 사회 전체로 멀리 더 멀리 퍼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렴 교육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갖는 시선들도 있고, 하나마나한 것이라는 인식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좋은 책을 봐야 좋은 사람이 된다'는 옛 성현의 말씀처럼, 도덕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현대사회일수록 청렴 교육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온다. 진부하지 않은 도덕적 자극을 통해 각 공직자들의 인격적인 성숙은 물론, 청렴한 공직 사회 만들기에 여념 없는 청렴연수원. 이들의 뜨거운 열정은 보다 청렴한 내일을 위해 쉽없이 뻗어나갈 예정이다.

# 한-호주, 재외국민 권익보호 교두보 마련

## 호주 연방 옴부즈만과 양해각서 MOU 체결

호주에는 15만 명이 넘는 동포와 5만여 명의 유학생·워킹 홀리데이 참가자가 거주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호주 사람은 1만 2천여 명에 달하며, 연간 12만 명 이상의 호주 사람이 한국을 방문한다. 양국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재외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긴밀한 채널이 필요해졌다. 이에 권익위와 호주 연방 옴부즈만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MOU 체결을 추진,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 재외국민 고충 해결과 교류 활동 협력 체계 구축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과 호주 연방 옴부즈만 콜린 니브(Colin Neave) 옴부즈만은 양국의 재외국민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 MOU를 6월 10일 전격 체결했다. 이로써 양국 재외국민의 고충 해결과 교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와 호주 연방 옴부즈만은 상대국 재외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우선해 처리하기로 하고, 상대국 언어로 민원 신청과 회신이 가능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상대국 재외국민 고충 처리 현황 정보를 정례적으로 교환하는 등 양국 간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아·태 지역의 선진 옴부즈만인 두 기관이 보유·운영하고 있는 우수 정책·제도 등에 대해서도 적극 교류하고자 합의했다.

호주 옴부즈만은 선진 옴부즈만으로서 사회의 변화와 이슈에 발맞춰 체계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왔다. 1977년에 설립된 호주 연방 옴부즈만은 총리실 산하의 연방정부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군사·연방경찰·조세·이민국 등 연방정부 기관과 유학생 관련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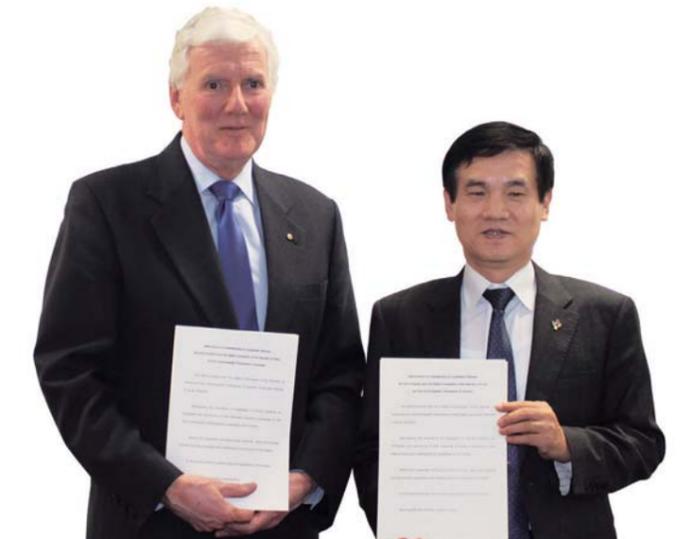
1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이 6월 10일 호주 캔버라에서 콜린 니브 호주 연방 옴부즈만과 양국 재외국민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 시스템 공유 등 상호 업무 협력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2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이 시드니 현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호주 교민들로부터 이민 문제, 유학생 처우 등 각종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설교육 기관에 대한 민원 조사 및 처리, 공익신고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민자·유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는 호주 연방 옴부즈만은 민원인의 권리 구제 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선진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권익보호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MOU 체결은 권익위가 또 다른 선진 옴부즈만과의 정책 교류 확장과 효과적인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평가된다. 권익위는 이번 MOU 체결처럼 보다 많은 국가의 옴부즈만과 협력 채널을 구축해, 교민들의 고충을 정기적으로 청취하는 등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역할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 호주 연방정부에 한글로 원활히 민원 신청 가능

한-호주 연방 옴부즈만 MOU 체결로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권익위의 역할에 기대감이 한층 커졌다. 그동안 해외 거주 교민들이 언어 장벽, 거주국의 민원 처리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고충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었기 때문이다.

호주 교민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권리 구제 수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 특히 영어 구사가 자유롭지 않은 1세대 교민들은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이번 MOU 체결로 모국어 민원 신청, 회신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이러한 고충이 전격 해소되리라 여겨진다. 바로 상대국 언어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을 방문해 고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교민들의 큰 관심과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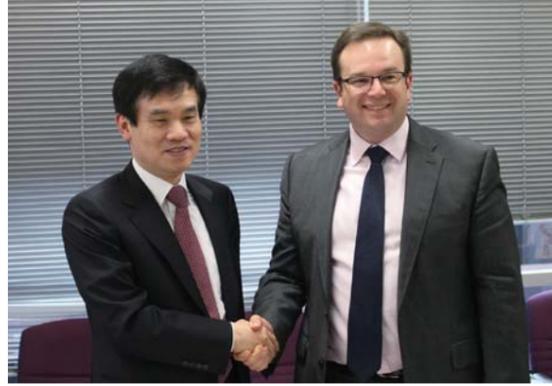
양 기관은 MOU 체결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한-호주 연방 옴부즈만 MOU 이행 협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반기별로 재외국민 고충 처리 현황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옴부즈만 기구 및 MOU의 성과를 홍보해 해당 서비스의 정보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 재외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의 손길 전해

권익위는 양해각서 체결 후, 시드니 총영사관에서 호주 연방 옴부즈만과 합동으로 호주 주재 기업인, 유학생 등 재외국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서로의 민원 처리 시스템을 소개하고 유학생 처우, 이민 문제, 복수국적 문제 등 교민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귀 기울여 청취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각종 사건, 사고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들에게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 자리에는 '워홀러를 돕는 자발적 단체, 코와이(KOWHY: Korean Working Holiday Youth)'가 참석해 워홀러(워킹 홀리데이 참가자) 및 유학생 권익 단체에 대한 홍보, 지원 역시 요청했다. 코와이 단체장은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들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경



▶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과 리처드 글렌(Richard Glenn) 호주 부 옴부즈만이 간담회를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우, 코와이의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출국 전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로 코와이에는 상습 임금 체불 업체, 숙소 현황 등 현지 적응에 필요한 여러 정보가 축적되어 있어, 워홀러 및 유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전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번 호주 연방 옴부즈만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 및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 호주 교민들에게 커다란 힘을 전하려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이 호주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호주 워홀러, 유학생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청년들

## Let Me Introduce about KOWHY '코와이'를 소개합니다

2014년 5월, 시드니에 거주 중인 10여 명의 청년들이 주축이 돼 탄생한 자발적인 청년 단체 코와이(KOWHY: KOREA WORKING HOLIDAY YOUTH). 이 단체는 부당한 권익 침해로 고통 받는 한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좋은 워킹 홀리데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다.

"호주는 참 좋은 곳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환경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내가 처음 경험한 호주도 그저 들었던 대로의 모습과 매우 달랐다. 이렇듯 내 경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많은 유학생과 워홀러들에게 내가 아는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 코와이 3기에 지원해 활동하게 되었다"라며 허한얼 군은 코와이로의 지원 동기를 밝혔다.

한국 청년들에게 워킹 홀리데이 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나 직접 마주친 호주의 현실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됐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워홀러들이 부당한 고용 체계와 열악한 주거 환경 같은 문제에 노출되어도, 호주에 단기간 동안 체류하는 특성 때문에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여러 문제들을 스스로 또 건강한 방법으로 풀어나가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코와이다. 이들은 온라인 활동, 오프라인 행사, 캠페인 등을 통해 워홀러들에게 법률 조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주에서 생활하는 대한민국 청년

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처음에는 고작 청년 몇 명이 모여 매년 새로 들어오는 약 2만 명의 생활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런 단체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소속되어 있음에 매우 감사한다"라며 이소라 양은 코와이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코와이는 시드니에 거주하는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와 유학생으로 조직되어, 매주 정기 회의에서 결정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동안 한인 축제 및 워홀러 캠프 참여, KBS 및 SBS Radio 등 방송 인터뷰, SNS 콘텐츠 제작, JOBG Project 등을 통해 코와이의 결성 취지를 알리고, 동참을 이끌어왔다.

한편 코와이는 기수제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 NGO 활동 및 미디어 콘텐츠(사진, 영상, 그림 등)에 관심 있는 사람, 행사 기획 및 진행에 소질 있는 사람, 글을 매번 연재할 수 있는 사람 등 더 좋은 워킹 홀리데이를 '함께' 만들기 위해 늘 열려 있다.

청년은 곧 미래다. 코와이는 매년 꿈을 안고 호주 땅을 밟는 3만 명의 한국 청년들에게 첫 사회생활에 대한 실망감 대신 세계를 넓게 볼 수 있는 눈을 선물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임 및 후원 문의 : facebook.com/koreawhy, kowhyaustralia@gmail.com



# 한 마을 갈라진 두 동네, 45년간 고립된 경주 광명4통 마을의 숙원을 해결하라!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도로망은 점점 더 체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네트워크화 되고 있다. 그 중 서울에서 부산 간의 거리를 대폭 단축시킨 경부고속도로는 일일생활권을 만들며 국민의 통행 편의를 도운 것은 물론, 원활한 물류 운송 등 전국을 하나로 연결 짓는 최고의 인프라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도로 인근에 위치한 주민들은 본의 아닌 희생양이 되며, 극심한 불편 속에 원성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국책 사업 즉 국가를 위한 일은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가치가 있을 터, 단 한 사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지난 8월 26일, 경북 경주시 선동 동사무소 대회의실에 권익위를 비롯해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인 이유였다.



▶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이 광명4통 마을 주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광명4통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소가 관건이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국책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했다. 이에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양측의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해 합의점을 찾으려, 수차례에 걸친 자료 수집과 현장 조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

## 불편 악화 vs 공사 중단, 기로에 놓인 경부고속도로 확장 공사

경상북도 경주 광명4통 마을 주민 1,993명. 이들은 45년간 숙명처럼 겪어온 불편에 대해 중지부를 찍어야 했다. 지난날 광명4통 마을은 광명3통 마을과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했었던 평화로운 한 동네였다. 그러던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동네가 도로를 중심으로 양분되었고, 폭 8m의 작은 지하 통로만이 두 마을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로 자리를 지켰다.

이러한 도로 개설로 광명3통 주민들은 경주 시내로의 접근이 한층 쉬워진 반면, 광명4통 주민들은 폭 8.0m에 불과한 지방도 904호선을 통해야만 겨우 경주 도심이나 옆 마을로 진입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마저도 중앙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해야 가능한 일이었기에, 마을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45년의 세월 동안 크고 작은 불만들이 하나둘 쌓인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게 된 경부고속도로 연양~영천 확장 공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고속도로 확장은 마을을 고립시키는 통로가 더 길어진다는 의미로, 주민들의 피해 역시 커지리라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경부고속도로가 기존보다 3m 더 높은 성토로 건설될 경우, 광명4통 마을은 더욱 고립될 것이다. 따라서 마을의 발전과 지역 단절 해소를 위해, 성토 구간 약 200m를 교량으로 변경 시공해 주민들이 교량 아래로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기존에 통행하던 지하 통로 대신 19m 구간만을 교량화 할 예정이라며, 추가 비용 및 예산 문제 등을 들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궁지에 몰렸던 광명4통 주민들은 마지막 도움의 손길을 뻗쳐 지난 4월 29일 권익위 교통도로민원과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현재 광명4통 마을 주민들이 경주시내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지하 통로

**주민들의 불편 해소, 국책 사업 수행까지 완수한 현장조정회의**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광명4통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소가 관건이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국책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했다. 이에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양측의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해 합의점을 찾으려, 수차례에 걸친 자료 수집과 현장 조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경부고속도로 성토부 교량화 가능 여부 및 교량화 시 범위'를 쟁점으로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렇게 속히 민원 처리가 이뤄진 지 4개월 차에 접어든 8월 26일, 경주시 선도동사무소에는 광명4통 마을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경상북도 부지사, 경주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최종 중재안을 도출해냈다.

해당 중재안에 따르면 향후 한국도로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변경 승인 시, 기존 지하 통로 지점에서 70m 구간을 교량화 하고, 신설 예정인 19m의 교량화 구간은 지방도 904호선 이설 계획에 따라 이전 설치하기로 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은 지방도 904호선 이설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19m 교량화 구간의 위치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 전액을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현 지방도 904호선의 선형을 개량·확장하고, 중앙선 폐철도 활용 방안 기본 구상 용역 시 중앙선 폐철도 철거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8년까지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광명4통 마을 인근의 중앙선을 즉시 폐선하고, 경주시 역시 중앙선 폐선이 확정되는 대로 민원 구간의 철로를 철거하기로 했다. 위와 같은 권익위의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관계 기관이 중재안의 내용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

해당 중재안에 따르면 향후 한국도로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변경 승인 시, 기존 지하 통로 지점에서 70m 구간을 교량화 하고, 신설 예정인 19m의 교량화 구간은 지방도 904호선 이설 계획에 따라 이전 설치하기로 했다.

”



▶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이 현장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있다.



▶ 고충민원이 원만히 해결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있는 민원인 대표

현장조정회의를 마친 뒤, 광명4통 마을 주민 대표는 “마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교량화 사업이 마침내 성사돼, 쉽게 왕래할 수 없었던 이웃 동네가 45년 만에 다시 하나로 이어져 기쁘다”며 “공사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마을주민 모두 최대한 열심히 도울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광명4통 마을을 위해 애써주신 권익위 이하 모든 관계 기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표했다.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나서 주시고,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경주시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력함으로써 성사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장조정회의는 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추후 진행될 사항에 대해 서로 약속한 자리이니 만큼, 권익위도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경주시 광명동 광명4통 마을 앞 성토부 교량화 요구' 현장조정회의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더불어, 주요 국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여러 부처가 관련해 있거나, 다수의 이해가 얽힌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견을 조정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생생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더불어, 주요 국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터. 권익위는 앞으로도 여러 부처가 관련해 있거나, 다수의 이해가 얽힌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견을 조정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생생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경주시 광명4통 마을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모두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다

지난 7월 6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안은 공익신고의 범위가 180개 법률에 한정되어 있었던 문제점을 보완해, 279개 법률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선박안전, 아동학대, 학교급식 위생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범위가 확대되어 공익신고자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공익신고 대상 및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1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주요 법률 일부가 공익신고 대상에 빠져 있어 지속적으로 개정 요구가 있어왔다. 더불어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신고자의 책임 감면을 확대하고, 해고 등의 불이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공익신고의 범위 확대와 공익신고자의 보호 강화라는 현실적인 요구가 반영됐다.

개정법은 국민 다수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법률(공중위생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52개,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17개, 내부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법률(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등) 27개, 신고는 되었으나 적용 대상 법률에 미 포함된 법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3개 등 총 99개 법률이 추가됐다.

이로써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법률 등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야의 법률이 다수 포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신고자의 위법 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를 감경·면제할 수 있었던 책임 감면의 범위를 행정처분(영업정지·과태료·자격정지 등)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신설

이번 개정법은 특히 소속 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큰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해 특별 보호 조치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공익침해 행위가 이미 발생했거나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한 내부 신고자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내부 신고자가 신고하려는 내용이 어떤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신고를 하더라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 (사례) 제주 세계 7대 경관 전화 투표 관련 공익신고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 투표와 관련, 내부 직원은 회사가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공익신고를 하였다.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소송에서 1심 법원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공익침해 행위로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공익신고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 포함 여부에 상관없이,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내부 신고자가 신고한 경우 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의 보호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최대 2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하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 신고자(파파라치)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했다. 또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내·외부 신고자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 공익침해 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 기능 강화

개정법은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해 현황 및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익침해 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품의 제조·판매 중지, 회수 또는 폐기, 영업정지·자격정지 등),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에서 이첩한 공익신고 사건의 조사·수사 결과에 대해 신고자의 이의 신청권을 규정하고, 권익위가 조사·수사 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익신고기관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관리하는 공익신고 통합정보 시스템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법은 2016년 1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법의 시행이 공익신고 제도의 새로운 전환기가 되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안전 분야와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 분야에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기능이 강화돼, 국민의 삶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가 조성되리라 확신한다.

## 한눈에 보는 국민권익 주요 사례

# 국민의 마음으로,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고자 노력 중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국민권익의 수호자로서,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도 권익위에 접수된 행정심판, 고충민원, 부패·공익신고 등의 사례를 통해, 소중한 국민권익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전해 드리려 합니다.



### 동거 노부모 주택 포함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

#### Case

A씨는 2012년 12월 약 10년 간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음해 1월 OO세무서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했다. OO세무서는 아파트 매도 당시, 동거 중인 A씨의 시어머니가 경기도 안성 소재의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말 양도소득세 4천여 만 원을 고지했다. A씨는 결혼 후 현재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시어머니의 주택은 타인의 토지에 건축된 지 50년이 지난 무허가 주택일 뿐 아니라 30년 넘게 친척이 집세 없이 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Solution

권익위는 동거하는 노부모가 소유한 재산가치 없는 무허가 주택을 합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현행 법령상 OO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A씨가 아파트 양도 당시 세법에 대해 잘 몰라 시어머니와의 세대 분리나 노후 주택 처분 등을 하지 못해 고액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안' 국토교통부에 권고

#### Case

2007년부터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MS) 운용으로 부실 검사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일부 불합리한 제도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민간 검사소 간 과도한 경쟁이 허위·부실 검사의 원인으로 작용해 검사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 Solution

권익위는 「자동차 검사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안전 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의 기준을 현실화하고, 검사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며, 공단의 출장검사를 정비를 국민의 편익을 보다 증대할 예정이다.



### 국립묘지 안장 거부당한 학도의용군, 국가유공자 예우

#### Case

6.25전쟁 발발 당시 중학생 K씨는 학도의용군으로 자원입대해, 2년 4개월을 전장에서 보냈다. 1953년 휴가 중이던 K씨는 2년 전인 1951년 3월 이미 대통령의 '중군학생 복교령'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듣고 학교로 돌아갔다. 이후 K씨는 2001년 참전 유공자로 등록되어 2013년에 사망했으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는 K씨의 병적에 '1953. 3. 26. 탈영'으로 기록되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된다며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 Solution

중앙행심위는 K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부당하다며,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2015년 2월 최종 결정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지원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해당 처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정상참작 등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현장 조사로 이를 뒷받침해 법 집행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반영하였다.



### '집단급식소 관리 개선 방안' 복지부·식약처에 권고

#### Case

「식품위생법」에는 급식 인원 1회 5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회복지시설 규정에는 급식 인원이 아닌 시설 이용자(종사자 제외)를 기준으로 5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에만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단 식중독 우려가 높은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에는 1회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면, 식중독 예방 및 집중 관리를 위해 반드시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Solution

많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식품위생법」과 사회복지시설 규정 간의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 기준 충돌' 및 '1회 급식 인원 50명 이상'에 대한 해석 차으로 집단급식소 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시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집단급식소와 관련해 「식품위생법」과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영양사, 조리사) 배치 기준 규정을 통일시키고, 식중독 방지 및 위생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집단급식소 미신고 시설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글:  
윤진아가자

# Now 지금은

##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 On

눈먼 국가보조금을 노리는 압체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보조금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권익위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가 재정을 지키는 선결 조건은 무엇보다 고질적·관행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행태 뿌리 뽑기일 테! 이것이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가 활동하는 이유다.

### ‘눈먼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압체족, 7년간 590억 편취

업체 대표 A씨는 정부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해당 지원금을 과제와 무관한 자사 제품 제작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연구개발비 1억 수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시 영화 제작 관계자 B씨 등은 해당 도(道)와 시(市)로부터 받은 영화 제작 지원 보조금의 정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수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광역시 버스 업체 대표 C씨 등은 버스 운전기사를 허위로 등록해, 시(市)에서 지원되는 버스 재정 지원금 2억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권익위가 출범한 지난 2008년 이후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 사건은 총 811건으로, 적발 금액은 59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등 정책성 재정 지출의 누수를 철저히 막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대상 9대 분야는 ▲연구·기술개발(R&D) 분야 ▲농·어·축·임업 분야 ▲교통 분야(버스 보조금·유가 보조금) ▲교육 분야(국·공립 사립대 보조금) ▲체육 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문화예술 분야(콘텐츠 산업 육성 등 보조금) ▲복지 분야(어린이집·사회복지 시설 보조금) ▲노동 분야(직업능력 개발·사회적 기업 보조금) ▲산업 분야(중소기업 창업·벤처 육성 등 보조금)에 해당된다.

신고 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로도 가능하다. 전국 어디에서나 정부 대표 민원 전화 110으로 신고·상담할 수 있고, 신고자는 관련 법에 따라 신분 및 신변 보호·비밀 보장과 함께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시책을 장려하는 등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 공공·민간 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우리나라의 국고 보조금 예산 규모는 2015년을 기준으로 2,240개 사업에 대해 58.4조 원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례해 부정수급의 규모도 점차 급증하는 추세다. 따라서 드러나지 않은 재정 누수도 훨씬 더 막대하리라 짐작된다.

한 해 정부 예산 약 375조 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입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 다행히 올 1월 국민의 눈과 귀, 발이 되어 부정 행태를 상시 감시할 통합 거점이 생기면서, 이제는 복지 급여 부정수급뿐 아니라 정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개인 및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설 자금·운영자금 등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도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 조직으로, 정부의 주요 복지 정책과 보조금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 부처 및 공공 기관으로부터 전담 조사 인력을 파견 받아 신고 상담·접수, 신고 조사·처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국민 한 명, 한 명의 적극적인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가 튼튼한 국가 재정을 만드는 초석이 될 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국민들 스스로 올바른 신고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 Smart Tip

#### 보조금 부정수급, 이렇게 신고하세요!

- **신고상담**: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10 (정부 대표 민원 전화)
- **접수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접수방법** - 방문·우편: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스: (02)2110-0678
  - 현지 출장: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요청 시, 센터 직원이 상담 후 방문해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부패·공익 신고 앱
- **신고자 보상**: 공공 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관련 법률 관계가 확정된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 **신고자 포상**: 부정수급 신고로 인해 공익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금품 등을 받아 지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 **처리방법** - 수사 기관(검·경)·감사원·감독 기관 이첩 원칙  
- 단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 **신고요령**: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보조금 부정 수급자와 부정 행위 관련 증거 자료 제시

※ 신고자는 비밀 보장, 신분 보장, 신변 보호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휴가철 국내 여행 불만 순위!

1년 동안 손꼽아 기다려온 여름휴가가 '울화통 터지는 기억'으로 남는다는 민원이 많아,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권익위는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국내 여행 관련 민원 1,030건을 분석해, 결과를 집계했다. 그리고 이렇게 집계된 분석 결과를 각 관계 부처에 제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XX시 여행 중 아침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갔는데, 아이는 밥맛이 없다고 해 따로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이 '3명이 와서 2인분을 시키면 음식을 팔지 않겠다'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난감하고 무안한 마음에 다시는 XX시를 찾고 싶지도 않습니다."

2013년 3월

"축제 기간이라고는 하나, 숙박업소에서 숙박비를 공지하지 않은 채 전화 문의만 받더니 1박에 5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XX에서는 해당 숙박업소에 숙박비 사전 공지 및 합리적 가격을 제시하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가족과 함께 XX계곡으로 놀러가 자리를 잡았는데, 낯선 사람들이 다가와 '평상을 사용하려면 5만 원을 내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계곡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2014년 7월

"XX축제에 가족과 함께 가봤는데, 바다에 쓰레기가 너무 많더군요. 환경정화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만족하고 다시 찾을 텐데.....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2014년 8월

"XX시로 여행하러 와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다 자리가 없어 다시 나왔는데, 주차비로 300원을 요구하네요. 주차는 하지도 못하고 자리가 없어 나오는 차량에 주차비를 부과한다는 건 부당하니,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XX시를 관광하던 중,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시된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카드는 받지 않는다고 하며, 현금이 없다고 하니 택시비를 대신해 가게에서 담배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담배 심부름을 하면서, 헛웃음만 나왔네요."

2013년 7월

"XX해수욕장에서 놀다가 배가 고파회를 먹으러 갔는데, 식당가 초임부터 식당 주인들이 차를 막고 핸들을 잡아채는 등 상식 이하로 호객 행위를 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밥맛을 떨어뜨리게 하는 호객 행위, 제발 철저히 지도·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 Mission!!

## 국내 여행 관련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라!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내 여행 관련 민원은 총 1,030건 (월 평균 34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과 비교해 2014년에는 민원이 15.2% 감소하는 등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이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여파로 여행 자제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내 여행에 대한 민원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휴가철 여행지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는 국내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지자체 등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지도·감독 체계와 여행지의 서비스는 여전히 기대 이하이기 때문이다.

2013년 이후 월 단위로 민원 발생량을 분석한 결과, 국내 여행 관련 민원은 여름휴가가 몰리는 때인 7,8월에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2014년 7,8월의 경우 169건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는데, 이는 특정 시기로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휴가 문화와 성수기의 반짝 특수를 노리는 상술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민원 발생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153건 (14.8%)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129건(12.5%), 부산광역시 122건(11.8%)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지별 민원은 경주시가 73건(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주도 55건 (5.3%), 강릉시 52건(5.0%) 순이었다.

민원의 전반적인 유형으로는 주차비·택시비 등 요금 관련 민원이 431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불친절 301건(29.2%), 쓰레기 방치·위생 불량 194건(18.8%)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요금 관련 민원의 경우에는 주차비(70건), 택시비(64건), 숙박비(56건), 자릿세 요구(36건) 관련 이의 등의 순이었다. 불친절한 응대는 주로 식당(32건), 숙박 시설(29건), 택시(27건), 버스(22건) 등에서 발생했다. 또한 쓰레기 방치·위생 불량 관련 민원은 해수욕장·해안가(68건), 계곡·산림(30건), 식당(13건)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여행 민원 감소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관계 기관에 제공하였다.



### 행복 나눔

- 36 **청렴 토크**            거울에 비친 스스로를 돌아보는 청심의 자세
- 40 **일상생활 개념노트**    우리 집 냉장고야, 더위를 부탁해~
- 42 **문화 레시피**            떠나자! 열대야를 잊게 할 문화 바캉스~
- 44 **똑똑! 생활법률**        흔히 일어나는 교통사고 처리,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 46 **꼭 알아두세요!**        “청년에게 내일을,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 48 **ACRC News**
- 50 **독자 음부즈만**



# 거울에 비친 스스로를 돌아보는

## 청심의 자세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김영래 교수



김영래 교수는 ...

현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현 투명신뢰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회장  
전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다산 정약용 선생은 '청렴함이 큰 장사'라 했다. 작은 이익에 눈이 멀면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진리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대한 힘은 분명히 존재한다. 심지어 그 힘은 개인의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부터 비롯되어 서서히 세상을 변혁해간다. 이것이 권익위 자문위원 김영래 교수가 청렴 사회 건설을 위해, 평생 한길을 걸어온 이유다.

#### 한평생 지켜온 청렴에 대한 신념과 실천

청렴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울컥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을 청렴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며 알려진 김영래 교수에게 청렴은 삶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에게 청렴이란 말로만 강조하는, 혹은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이상적 개념이 아니다. 바로 실천, 그 자체인 것이다.

그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정치학자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관심은 훨씬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일기장에는 그때 그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기록이 빼곡하다. 매년 4.19에는 그에 대한 회상이 적혀 있고, 한일회담이나 대통령 선거 등에 대한 단상도 구체적으로 남아 있다. 그러다 미국 유학 시절, 청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가슴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1976년 미국 유학을 했는데,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우리는 유신 체제였을 때죠. 당시 후보가 지미카터였어요. 남부 조지아의 작은 주지사였고, 돈도 없었던 사람이예요. 미국에서 자유롭게 깨끗한 선거 과정을 보면서 '정치와 돈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깨끗한 돈으로 정치를 하면 정치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 자유롭게 깨끗한 선거 과정을 보면서 '정치와 돈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깨끗한 돈으로 정치를 하면 정치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후 김영래 교수는 정치 후원 제도 발전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해 봤고, 정치 자금의 투명성에 관한 신문 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활동 등을 역임해왔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대학원에서 미국의 정치 자금에 대해 연구를 했어요. 과거 우리나라는 정치 자금 문제가 많을 때였는데, 이를 개선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당시 미국에서 국민들이 연말에 세금정산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 문서 상에 3불씩 선거 자금 기부 의사를 묻는 항목이 있는 걸 보고, 벤치마킹을 해 우리나라에 적용했죠. 관련 논문도 발표하고요.”

청렴을 모토로 한 그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정당 대표, 기업 대표, 전경련 등 26개 단체가 멤버로 참여한 ‘투명신뢰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의장으로도 활동했으며, 현재 권익위 자문위원, 국무총리자문기구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 내나라연구소 이사장, 아주대 명예교수 등을 맡아 청렴 사회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청렴한 정치 풍토 조성에 중심이 되다

청렴이 곧 국가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는 김영래 교수. 청렴 사회에 대한 그의 고민은 깊고 진지하다. 그가 바라보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는 어떠한 모습일까.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46위에 그칩니다. 안타깝지만 몇 년 동안 답보 상태인데요. 최근 이슈가 된 원전 비리, 방산 비리 등으로 향후 더 하위권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렴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 제고, 부패 공직자나 인사에 대한 엄격한 법의 적용 등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나라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의 시작과도 맞닿는다.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게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지칭하는 매니페스토는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이지 않았던 개념이었다. 그는 정치 문화의 변화를 실현하고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를 조직해, 2006년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우리나라의 매니페스토 역사는 길지 않지만, 1830년 영국에서부터 시작돼 아주 오래 전부터 선거에 적용되어온 제도예요. 근본적인 취지는 매년 정치인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자는 거죠. 하물며 초등학교에도 나름의 평가가 있는데, 과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당선만 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평가 제도가 없었거든요. 매니페스토는 평가를 통해 책임 있는 정치, 신뢰할 수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어요.”



“

우리나라의 매니페스토 역사는 길지 않지만, 1830년 영국에서부터 시작돼 아주 오래 전부터 선거에 적용되어온 제도예요. 근본적인 취지는 매년 정치인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자는 거죠. 하물며 초등학교에도 나름의 평가가 있는데, 과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당선만 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평가 제도가 없었거든요. 매니페스토는 평가를 통해 책임 있는 정치, 신뢰할 수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어요.

”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공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당원은 아니었지만, 정치학자로서 정치 현장을 경험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공천 심사 서류에 의정 활동 계획서를 신청 서류의 하나로 첨부하도록 했는데요. 2006년 지방 선거부터 도입돼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용됐어요. 현재는 공직선거법에도 일부 조항이 적용되어 있고요. 인기 영합식의 공약이 아니라 정책 대결을 하는 선거, 보다 투명하고 선진적인 선거 문화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애정 어린 당부로 바라는 청렴한 내일, 청렴한 세상

그는 권익위가 과거 대통령 직속 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로 있었던 시절부터 자문을 하며, 정책 수립에 대한 조언에 힘써왔다. 그러다 2005년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후부터는 공식적인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자문위원으로서 역량을 펼치고 있다. 때문에 권익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른 것은 당연하다.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권익위에서 실효성 강화 및 보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간의 과정을 함께한 바, 김영래 교수는 청탁금지법이 청렴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좀 더 다듬어 나가야 할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더불어 김영래 교수는 홍보에 대한 중요성도 피력했다. “지금의 권익위는 3개 기관이 통합됐는데요. 기관의 명칭에서 부패방지 업무가 잘 드러나지 않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민들이 권익위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청렴 관련 업무는 물론 많은 유익한 일을 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홍보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의 말처럼 사회는 어느 한 쪽만의 큰 목소리로는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작은 실천들이 지속되고, 균형과 조화가 이어질 때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혁을 허락한다. 묵묵한 걸음으로 올곧은 가치를 전하며, 청렴 사회를 만들어 온 김영래 교수. 선도자로서의 바른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한 그의 축수는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을 향해 예민하게 뻗어 있다.

# 우리 집 냉장고야, 더위를 부탁해~



후~우. 2015년 여름도 매우 후덥지근할 전망이다. 폭염 주의보는 물론 폭염 경보까지 발령되었고, 끓어오르는 태양보다 한술 더 뜬 후덥지근한 공기가 온몸을 장악한다. 이러한 날씨 탓인지, 뒤늦은 디저트 문화의 호황 때문인지,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에는 빙수 열풍이 불었다. 그리고 빈 틈 없이 차고 넘쳤던 커피숍들 틈바구니 사이로 빙수카페가 빼곡히 자리를 채웠다. 또 SNS의 인기를 타고 비주얼 킹왕짱인 신라호텔 애플망고 빙수는 '럭셔리 호텔빙수'의 새바람으로 등극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제작년 여름부터는 제철 과일을 통째로 넣어 만든 팝시클(우리가 흔히들 아는 '하드')이 또 다른 쿨 아이템으로 눈에 띄었다. 디저트 하나라도 건강을 생각하는 이즈음, 인공감미료나 합성첨가물 없이 만든 천연의 맛이 소위 먹혔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장하고 싶게 만드는 비주얼로 남녀노소의 구매욕을 간질였다. 하지만 슬프게도 문제는 가격……. 500원이면 먹었던 하드를 4000원을 내어주며 먹기에는 차마 아깝고, 10,000원 이상 하는 빙수를 자주 먹는 것은 지나친 호사가 아닐까란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했다! 유명 브랜드 못지않은 비주얼과 혀끝을 짜릿하게 녹일 홈메이드 시크릿 노하우. 지금부터 화끈하게 대공개한다!

## ★ 아삭아삭 과일 그대로, 수박 빙수 어때요? (1~2인 분량)

**재료** : 수박 간 것 1&1/2컵, 블루베리 10~12개, 토핑용 수박 적당량, 연유 3큰술, 블루베리잼 1.5큰술, 민트잎 약간

- ① 수박은 믹서에 곱게 갈아 아이스크류에 부어 4~5시간 얼린다.
- ② 토핑에 올릴 수박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둔다.
- ③ ①의 수박얼음을 갈아 연유를 켜켜이 뿌려가며 그릇에 담은 뒤, 수박과 블루베리를 토핑으로 올리고 블루베리 잼을 얹어 완성한다.

**Smart Advice** : 수박을 갈아서 얼려 만든 빙수라 녹아도 묽어지지 않아 끝까지 맛있다. 슬러시처럼 시원한 맛으로 즐기고 싶다면 연유 대신 사이다를 적당히 부어 먹어도 좋다.

## ★ 우리 집에서 망고 빙수 먹고 갈래요? (1~2인 분량)

**재료** : 우유 300ml, 아이스망고 2개, 연유 4큰술, 설탕 1큰술, 레몬그라스 잎 약간

- ① 냉동실에서 적당히 얼린 우유를 꺼내 포크를 이용해 곱게 부수거나 믹서기에 돌려 곱게 갈아준다.
- ② 다시 믹서기에 아이스망고 1개를 넣고 연유 4큰술, 설탕 1큰술을 첨가해 곱게 갈아 망고소스를 만든다.
- ③ 남은 아이스망고 1개는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잘라 토핑으로 올린다.
- ④ 투명한 볼에 갈아 놓은 우유를 먼저 담고, 망고소스와 썰어 놓은 망고를 순서대로 올려 완성한다.

**Smart Advice** : 우유를 얼릴 때 지퍼백에 우유를 담아 평평하게 얼린 뒤 부수면, 손쉽게 우유 얼음을 만들 수 있다.

입에서 살살~  
짜릿짜릿하게 녹아드는  
**Fruit Iced  
Flake!**



과일이 보여요~  
새콤달콤 알록달록  
**Fruit  
Popsicle!**



## ★ 베리베리 바나나 (4개 분량)

**재료** : 딸기&바나나 - 딸기(냉동) 5개, 바나나 2개, 우유 1/4컵, 설탕 1작은술  
바나나 - 바나나 1개, 우유 1/4컵, 레몬즙 약간  
라즈베리 - 라즈베리(냉동) 1컵, 바나나 1개, 우유 1/6컵, 설탕 1작은술

- ① 냉동과일은 전자레인지에서 10초씩 돌려 살짝 녹인 뒤, 각각 남은 재료들과 함께 블렌더에 넣고 곱게 간다.
- ② 틀에 딸기&바나나를 붓고 스틱을 꽂아 냉동실에서 1시간 정도 얼린 뒤 바나나, 라즈베리, 다시 딸기&바나나의 순서로 붓고 얼려 완성한다.

**Smart Advice** : 재료의 윗면이 굳을 정도까지 얼린 뒤, 나머지 재료도 같은 방법으로 얼려야만 깔끔하게 예쁜 층을 만들 수 있다.

## ★ 러브러브 키위 러버 (4개 분량)

**재료** : 골드키위 4개, 그린키위 4개, 설탕 1작은술

- ① 골드키위는 큼직하게 썰어 블렌더에 넣고 설탕을 더해 간다.
- ② 그린키위는 껍질을 벗겨 도톰하게 슬라이스한다.
- ③ 틀에 1과 2를 붓고 스틱을 꽂아 냉동실에서 4~5시간 동안 얼린다.

**Smart Advice** : 키위를 너무 곱게 갈면 써까지 갈려 쓴 맛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한다.

## ★ Cool 워터파크? Cooler 워터메론! (4개 분량)

**재료** : 수박 간 것 3컵 분량, 멜론 간 것 2/3컵 분량

- ① 수박 간 것을 아이스버틀의 3/4 정도까지 채우고, 스틱을 꽂아 냉동실에서 1시간 정도 얼린다.
- ② ①에 멜론 간 것을 부어 다시 2~3시간 동안 얼린다.

**Smart Advice** : 당도가 낮거나 명이 든 못난이 수박도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 떠나자! 열대야를 잊게 할 문화 바캉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국이 찜찜 끓고 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열대야가 계속되는 이즈음……. 책, 뮤지컬, 전시, 축제를 누리는 문화 바캉스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후덥지근한 날씨가 무색할 만큼, 상큼한 활력과 시원한 여운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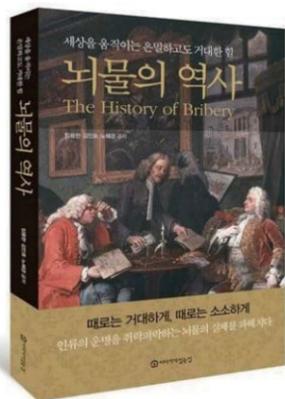
## BOOK 뇌물의 역사

### 인류 역사와 함께한 뇌물의 실체를 파헤치다

뇌물과 관련한 뉴스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해왔다. 정치·경제·스포츠계 등 어떠한 영역을 막론하고, 비밀리에 권력자에게 금품을 주며 시익을 취하는 행위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뇌물이 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는지 또 뇌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책 <뇌물의 역사>는 궁금증을 해소해준다.

동서양, 고대에서 현대까지 역사를 통해 뇌물의 실체를 밝히는 이 책은 총 5개의 챕터를 통해 뇌물이 사라지지 않는 근거를 제시한다. 1부에서는 은나라 탕왕의 6가지 반성을 통해 뇌물의 역사를 짚어 보며, 2부에서는 뇌물을 둘러싼 조선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3부에서는 뇌물이 어떻게 세상을 어지럽히는지, 4부에서는 뇌물로 한 나라가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끝으로 5부에서는 뇌물 없는 건강한 세상을 위한 노력들을 들여다본다.

인류 속에서 뇌물이 어떻게 사회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는지 설득력 있게 밝힌 이 책은 독자들에게 청렴 사회를 위한 지혜를 선물할 것이다.



### Information

저자 : 임용한, 김인호, 노혜경  
출판 : 이야기가있는집

## MUSICAL 명성황후



### 20년을 이어가는 감동 또 감격, 갈채…

뮤지컬 <명성황후>는 ‘대한민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 브로드웨이 진출, 대한민국 최초 웨스트엔드 진출, 대한민국 최초 1,000회 공연, 대한민국 최초 150만 관객 달성. 대한민국 뮤지컬계의 새 역사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20주년을 맞이한 이번 공연에서 더욱더 새롭고 색다른 무대를 선보였다.

1995년, 명성황후 시해 100주년을 기념해 만든 것을 시작으로 뮤지컬 <명성황후>는 지난 20년간 수없이 많은 무대에 올랐다. 오랫동안 한결같이 사랑을 받아온 만큼, 이번 20주년 공연도 기본 줄거리는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디지털 영상과 사랑 이야기를 추가해 관객의 감성에 보다 밀도 있게 다가가려 했으며, 새로이 편곡한 음악으로 다채로운 재미를 더했다.

이밖에도 명성황후와 고종의 혼례 장면에서 천장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영상을 추가해 역동적이면서도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으며, 극의 엔딩 장면에서 명성황후가 부르는 ‘백성이여 일어나라’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뜨거운 박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Information

기간 : 2015년 7월 28일 ~ 2015년 9월 10일  
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EXHIBITION 앤디 워홀 라이브 전



### 20세기 팝아트 거장과의 만남

20세기 시각 예술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주도했던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 그의 작품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대거 공개되었다. 이곳에서 진행 중인 ‘앤디워홀 LIVE’는 앤디 워홀의 고향인 미국 피츠버그에 위치한 ‘앤디 워홀 미술관’의 소장 작품을 전시하는 자리이다.

이곳에서는 워홀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사진과 상업 디자인으로 활동했던 뉴욕 시절의 드로잉, 팝 아티스트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1960년대의 실크스크린 작품 등이 전시되고 있다. 마릴린 먼로·마이클 잭슨 등 유명 인사들의 초상화 40여 점을 포함해, 앤디 워홀의 작품 약 400여 점을 한눈에 돌아볼 수 있으며, 동시대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작품 세계를 완성한 앤디 워홀의 위상을 체감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워홀의 시대별 작품을 대거 공개하며, 작가의 삶까지 생생하게 드러난 ‘앤디워홀 LIVE’ 전시. 전시회를 시작한 이래,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하며 크리에이티브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 Information

기간 : 2015년 6월 6일 ~ 2015년 9월 27일  
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 FESTIVAL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 얼쑤~ 절쑤~ 신명나는 탈춤 한마당

매년 9월~10월 즈음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한바탕 춤판이 벌어진다. 안동 지역이 보유한 전통문화유산을 계승하고자 1997년에 탄생한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의 신명나는 흥 때문이다.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은 공연자와 관객이 허물없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덕담을 통해 함께 판을 만들며 진정한 축제의 열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뽐내내는 열정으로 빼곡히 채운다.

이러한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의 행사는 한국 탈춤과 외국 탈춤 공연이 주를 이룬다. 중국·일본·러시아·프랑스·이집트 등 12개국의 국외 탈춤은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구경거리로, 방문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시민과 관광객, 외국 공연팀이 하나 되는 ‘탈놀이대동난장’은 리듬에 맞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다.

다가오는 가을, 다채로운 문화를 흥겹게 만끽하고 싶다면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을 강력히 추천한다.



### Information

기간 : 2015년 9월 25일 ~ 2015년 10월 4일  
장소 : 탈춤공원, 하회마을, 문화의 거리 등 안동시내 일원

# 흔히 일어나는 **교통사고 처리**,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교차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 부딪쳐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제 차량과 상대방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저와 상대 차량의 운전자는 서로에게 과실이 있다고 다투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 대한 문의〉

해당 교통사고는 '물피 사고'에 해당되며,  
합의와 미합의 그리고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인피 사고'와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물피 사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피 사고'에 해당되는데, '물피 사고'의 처리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합의)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경찰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의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에 해당 사고를 입력한 후 종결 처리합니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가 없거나(미합의) 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액이 20만 원 미만일 때에는 즉결 심판을 청구하고,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에 입력한 후 종결 처리합니다.

〈똑똑! 생활법률〉에서는 본의 아니게 겪게 되는 사건, 사고들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법률적인 면에서 살펴보고,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전해 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과정, 교통사고 성립 조건 및 여부, 범위에 관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으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생활법률 정보를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사장을 지나가던 중 낙하물이 차로 떨어져 제 차량이 손상되었고,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아내가 다쳤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교통사고로는 접수해주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성립 조건 및 여부, 범위에 대한 문의〉

해당 사고는 차량이 아닌 낙하물에 의해 차량 탑승자가 손상을 입었기에,  
교통사고가 아닌 안전사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1조 제3호 '낙하물에 의해 차량 탑승자가 사상하였거나 물건이 손괴된 경우'에 해당되어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 등을 적용해 안전사고 등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자살·자해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확정적 고의에 의해 타인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축대, 철개지 등이 무너져 차량 탑승자가 사상하거나 물건이 손괴된 경우', '사람이 건물, 육교 등에서 추락해 진행 중인 차량과 충돌 또는 접촉해 사소한 경우', '그 밖의 차의 교통으로 발생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안전사고의 경우' 등도 교통사고가 아닌 안전사고로 처리됩니다.



## 정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 대책 발표

## 청년에게

## 내일을,

## 미래

## 세대에게

## 희망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년 실업자의 수는 44만 9,000명, 취업 준비생과 잠재 구직자 등까지 포함하면 115만 7,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에코 세대'들이 취업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취업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 젊은이들에게 적성에 맞는 직장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임을 인지한 정부는 7월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통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관계 부처 장관과 6단체장이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 선언'에 서명했다.

###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 모색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저성장 기조, 노동시장 개혁 지연, 현장 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청년 고용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로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된다. 이에 따라 신규 인력의 수요가 저하되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이 지연되면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까지 정체 상태에 도래한다. 여기에 노동시장 구조 개혁 지연, 이중구조화 등으로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수요와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게 된다. 또한 그간 감소세를 유지했던 20대 인구가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하더라도, 2016년부터 시행 예정인 정년 연장의 의무화로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근로자의 수가 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경제·구조·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3~4년 간 청년 고용절벽은 지속될 우려를 안고 있다. 청년들이 제때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노동력 상실의 부작용이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 그리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절박한 청년실업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과 함께 단기간 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경제계와 함께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구성해,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갖도록 했다.

### 정년 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 충격 완화

이번에 발표한 정부 종합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2015부터 2017년까지 20만 개 이상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 부문 중심으로 단기간에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분야에 대해 신규 일자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통해 1만 5,000명의 신

규 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하고,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통해 2017년까지 1만 명의 간호 인력을 확충하려 한다. 또한 4,500명의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 기관의 청년 채용을 8천 명 이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유도하고자 '청년 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우량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인턴제를 연 5만 명까지 확대해 인턴 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며, 유망 성장 직종을 선정해 구직자 및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직업 훈련을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노동시장 개혁,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친화적 경제 구조를 조성하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도모해나갈 예정이다.

### 현장 중심 인력 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정부는 산학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산업계의 요구를 학교 교육에 적극 반영하려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진정 원하는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자 하는 것이다.

산업계 관점의 대학 평가를 확대하고, 산학 협력 선도 대학 사업 평가 과정에 취업 성과를 반영하도록 하며, 산학 일체형 도제 학교·Uni-Tech·장기 현장 실습제 등 재학생 단계에서 일·학습 병행제를 확산시켜 나가려 한다. 또한 산업 수요에 기반한 대학 구조 개혁을 실시해, 미래사회의 변화와 산업 수요를 적시에 반영한 대학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10월 말까지 세부 전공별로 중장기

인력 수급망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교통·육아 등 여러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기능 요원 배정 확대 등을 통해 재직 유인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청년 고용 지원 인프라 확충과 체계 정비

정부는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재평가해 재정 지원 사업의 유사 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려 한다. 이에 따라 청년 일자리 사업은 기존 34개에서 18개로 통폐합되는 재편을 거친다.

또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 효율화 작업을 통해, 청년 대학생에게 윈스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청년 해외 취업 촉진의 일환으로, 유망 직종의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한 청년 해외 취업을 연 1만 명 규모로 확대해 나가려 한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종합 대책 추진에 따라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4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며, 경제계는 신규 채용·인턴제·유망 직종 직업 훈련 등을 통해 16만 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처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가 창출될 예정이니 만큼, 모든 청년들이 즐겁게 웃으면서 출근하는 그날이 오길 조심스레 기대해본다.

# ACRC News

2015. 07+08

## 한국전기공사협회와 공익신고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권익위원회-한국전기공사협회 업무협약식**  
일시 : 2015. 6. 18(목) 14:30  
장소 : 위원회 전원회의실(5층)

권익위와 한국전기공사협회는 6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기공사 분야 공익 침해 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전기공사업 등록증 불법 대여 등 전기공사 관련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전기공사 분야 공익 침해 행위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었다.

양 기관은 향후 협회·회원사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공동 교육 및 홍보, 전기공사 관련 공익 침해 행위 신고 상담 협조 및 지원, 공익 침해 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추진,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활성화 및 청렴 정책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청탁금지법 이해관계자 합동 간담회 개최



권익위는 7월 28일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청탁금지법 이해관계자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규정될 예외적 수수 허용 금품등의 금액 기준 등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화협협회·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과수농협연합회·한국수산업총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산업협동조합·현대경제연구원·한국PD연합회·민주언론시민연합·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이해를 위한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

##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 시설 개선 업무협약 체결



권익위와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은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부터 교통안전 시설 관련 집단(잠재)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공단과의 협약으로 전국을 5개 권역(경상, 전라, 충청, 강원, 경기)으로 나눠 권역별로 교통안전 시설 관련 집단민원을 전수 조사해, 민원 지점을 명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 권익위-KOICA, 몽골정부 공무원 대상 반부패 정책 연수 공동 실시



권익위는 몽골정부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연수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권익위와 KOICA가 2011년 4월 '개도국을 대상으로 반부패·옴부즈만 분야의 무상 개발 협력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조 약정 체결' 후 다섯 번째로 실시된 초청 연수다. 이를 통해 몽골 반부패 관계 기관 공무원 15명이 참여해, 권익위의 부패 예방 정책과 한국 경찰의 감사·감찰 제도 등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배우고 돌아갔다.

## 이동신문고, 천안·공주시 현장방문 민원상담



권익위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충남 천안·공주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행정·문화, 복지·노동, 사회복지,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주택·건축 및 민·형사 법률 분야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으며, 행정심판 접수 상담, 공공 분야 예산 낭비와 각종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 침해 신고 접수도 병행했다.

## 국민의 삶, 그 현장 속으로



권익위 홍성철 행정심판위원회 부위원장이 7월 3일 오후 충남 공주시 전통시장을 방문해 메르스(MERS) 영향에 따른 서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방문 일정 이후에는 충남 공주시 웅진동 주민센터를 찾아 메르스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일선 행정 기관 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독거 어르신 기정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들으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독자 퀴즈

2005년 8월, 7개 기관의 민원 처리 시스템 통합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을 개시한 ○○○○○○는 2006년 모든 중앙 행정 기관을 통합한 후,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의 연계를 확대했다. 2011년에는 모든 교육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2015년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주요 공공기관 등 846개 기관이 연결된 범정부적인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익위의 민원 상담 대표 청구인 이곳은?






Hint

<국민권익> 0708월호, 'Special Theme 1&2' 칼럼이 실린 04~09p 참고

독자의 작은 소리도 들겠습니다

지난 호 정답

청탁금지법

지난 호 당첨자

- 김정령 (경북 포항시),
- 신창근 (경기도 성남시),
- 장은아 (전북 김제군),
- 이미연 (서울시 중랑구),
- 김희용 (경기도 수원시)



<국민권익>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비라는 점, 권익위를 잘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등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의견과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다섯 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독자의 한마디

김정령

경북 포항시

<꼭 알아두세요!> 칼럼을 통해, 언론에서 한창 떠들썩한 '맞춤형 급여'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언제나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호에는 세계 각국의 '뇌물 방지법'과 부정부패로 유명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꼭 실어주세요.

신창근

경기도 성남시

반부패 척결 및 권익 증진 사례 등을 홍보 동영상으로 제작해, 권익위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국민권익> 매거진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업로드된 동영상은 강의·교육 자료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장은아

전북 김제군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 이유 및 가치, 업무 등에 대해 초·중·고 수업시간에 자주 접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학습 효과로 인해 사회에서도 부정부패가 조금씩 사라지며, 청렴 문화 역시 조금씩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연

서울시 중랑구

<똑똑! 생활법률> 칼럼을 통해, 인터넷 쇼핑 관련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및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화면 캡처를 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라는 등 실질적인 조언, 꼭 기억하겠습니다. 언제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김희용

경기도 수원시

현재 권익위는 사법권이 없어, 각종 공공 기관에 권고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제지 및 조치 이행을 위해 법적 장치가 매우 필요하니, 준 사법권이라도 가졌으면 합니다. 이 부분이 권익위를 국민에게 보다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방세, 행정심판, 국가유공자, 비정상적 관행 신고, 복지부정신고, 공무원 시험·인사제도 문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민원24 관련 상담

국민결애 110 정부민원 110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평일) 오전 8시 ~ 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모바일 앱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영상전화(씨톡) 070-7947-8110

국민결애 110 정부민원 110

110 번호하나만 기억하시면, 정부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